

미동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

The Korean-American Coalition on JungShinDae, Inc.

최근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문제와
관련된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활동계획

P.O.Box 38
Little Neck, NY 11363
(212) 689-4113

1. 전체적 논평

- 가) '전쟁범죄'와 '인도를 어긴 범죄'를 지었고 그에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성실하고 진지한태도를 발견할 수 없다. 숙빈 강정전법으로 국제 여론과 언론앞에 일본정부가 반응을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선에 그치고, 실제적으론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책임은 지지않는 범위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.
- 나) 지난 7월 말의 예상밖의 급작스런 피해자 일부의 증언청취는 미야자와 정권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서두른 졸속 진상발표에 이용되었을 뿐이며 그 정도의 무책임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.
- 다) 그러므로, 성의를 다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근거한 공개사과, 국제법에 의한 범죄자 처벌,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 질때까지 우리의 정의롭고 강력한 활동은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계속되어야 한다.

2. 일본정부입장의 구체적 문제점

- 가) 강제종군위안부를 당시 공창제도의하의 일본 매춘여성과 같은 범주에서 보는 점은 일본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군인상대로 성적 위안 강요당한 성노예였음을 인정않으려는 매우 핵심적 문제이다.
- 나) 위안소가 있었던 지역에서 남북한과 대만이 일본식민지였기에 빠뜨렸다면 일본정부의 성실성과 우리에게대한 경시적 태도에 문제있다.
- 다) 위안부의 총수에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당시 위안소의 수, 군인수, 콘돔제공수등의 증거를 외면하고있다.
- 라) 모집과정에서의 일본군과 관의 직접관여를 일부 인정하므로 1940년부터 '국민총력조선연맹'이란 기관통해 군,관,민이 적극 강제모집한 일대한 법적책임을 피하려 하는점.
- 마) 현지에 두고 떠난 사례부분 인정할 뿐 사살,집단폭살시킨 비인도적사례 일체언급없다.
- 바) 명령체계에 대해 전혀 언급않으므로 일본정부와 군 수뇌부가 직접 기획 명령, 경영에 참가한 전쟁범죄 인정을 피하고 있는점.
- 사) 국제법에 근거한 전쟁과 인도에 어긋난 범죄에 대한 죄책을 범죄자 처벌은 물론 배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깨끗이 매듭하려는 의지 안보인다.
- 아) 교과서에 연령(12-40세)이나 규모및 집단학살,비참상에대한 언급없이 종군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할수 있다는 문교성의 지시 문제다.

3. 앞으로 활동

- 가) 일본정부와 UN 인권위에 국제법을 근거로 숨겨진자료찾아 철저한 진상조사, 책임자처벌, 배상요구.
- 나) 일본검찰에 책임자와 범법자 처벌에대한 고발장 제출
- 다) 7대과제 지속적으로 요구할것이며 이의 달성위해 국내외적으로 끝까지 2-3세대와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.
- 라) 해외및 미국내 자료발굴, 양심증언대회, 쫓겨대회, 서명운동, 영문자료집발간, 교육홍보활동, 활동기금마련, 국내외 관련단체들과 협력강화, 예술활동.